

‘국민의 정부’의 대학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학부교육 정상화를 위한 과제

유 팔 무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1. 학부교육, 무엇이 비정상인가

오늘날 한국의 학부교육에서 가장 심각한 비정상성은 교수와 학생의 관심이 ‘물과 기름’처럼 겹도는 현상이다.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할 때 전공이나 적성, 그리고 장래를 내다보고 특정 대학의 특정 학과 혹은 전공을 선택하기보다는, 주로 학교 ‘간판’, 명문이나 아니냐, 그 대학을 다니면, 또 그 대학을 졸업하면 사회적으로 어떤 대접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 그리고 수능점수를 견주어 진학을 한다. 진학한 후 학생들의 주요 관심사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시험의 굴레를 벗어나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 교양과 인격을 쌓고 폭 넓은 사교와 취미생활을 마음껏 해보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졸업 후의 취직이다. 앞의 것은 자신이 선택한 전공학과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이며, 뒤의 것 또한 대부분 밀접한 상관이 없다. 학생들의 실제적인 관심은 자신이 선택한 학과/전공 분야의 전공학습과 괴리가 큰 것이다.

예를 들어 사범대생, 정치학과, 사회학과 학생들이 행정고시, 사법고시에 열중하는 현상은 얼마나 정상적인가. 사범대생이 고시 준비로 대학 3, 4년을 보내다가 시험에 실패하면, 마음에도 없는 교사나 된다? 학생들은 또 영어학원을 가외돈을 주어가며 열심히들 다닌다. 그러면, 영문과나 영어과를 갈 것이지 왜 그 이상한 간판의 학과들을 다니는지 알 수가 없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또 오랜 세월 지속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젓혀놓더라도, 그것은 분명 비정상적인 일이다. 그리고

대학교육에서 낭비와 소외가 아닐 수 없다.

일반적으로 대학교육의 주요한 목적은 전문인력, 특히 전문연구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교양인을 만드는 것이거나 단순한 직장인을 만드는 데 있는 것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대다수의 4년제 대학교수들의 생각은 그럴 것이다.

교수들은 대개 이런 인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문연구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에 치중해 왔다. 그래서 강의내용도 일반시민이나 대중을 상대로 한 강연과 달리 학술적, 전문적 지식을 전달하는 재미없고 딱딱한 것들을 위주로 하고 있다. 이런 식의 강의에 학생들은 관심도 적지만 따분해 하고 있다. 교수 혼자 열 올리고 재미있어 하는 강의, 그러나 학생들의 반응은 없는 그런 강의가 오늘의 대학강단에서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의는 걸돌고 학생들은 졸리며, 오직 학점만이 교수와 학생 사이의 맥을 간신히 이어주고 있을 뿐이라 해도 그다지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런 강의에서는 교수도 학생도 모두 소외를 겪는다.

대학교육의 이와 같은 소외와 비정상성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따지는 일은 간단하지가 않다. 원인이 여러 곳에 있기 때문이다. 그중 가장 많이 지적되어 온 것은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이 낳은 비정상성, 즉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이 낳은 각종 병폐이다.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애초부터 대학을 노는 곳, 인격과 교양을 쌓는 곳, 취직과 출세를 위한 준비과정 등으로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인식하도록 만든 것이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교육과 학습을 도구로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도구주의적 사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 학습은 오직 대학에 진

학하기 위한 도구, 좋은 학벌을 획득하기 위한 도구로 간주하는 사고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도구주의적 사고는 대학생이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살아남아 있다. 대학에서의 교육과 학습 또한 졸업 이후의 취직이나 출세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인식, 따라서 간판과 학점과 졸업장이 중요하고 전공강의 역시 취직에 도움이 안 되는 과목이면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도구주의와 학벌주의를 학생들만의 탓으로 돌린다는 것은 물론 어이없는 일이다. 학부모, 교사, 기업, 사회 등 여러 곳에 진원이 있다. 그리고 대학은 비록 이러한 풍조들을 부추기는 진원지는 아니었고 오히려 도구로 이용되는 측면이 많았지만, 전혀 무관한 것도 아니었다. 대학은 간접적으로 이러한 도구주의와 학벌주의에 편승하였다. 소위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 '명문' 대학의 서열에서 고지를 점령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경쟁, 모든 전공 분야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모집, 운영하려는 백화점식 운영과 경쟁 등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이러한 경쟁은 명문 서열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명문서열의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대학들의 '독점' 현상과 욕망은 지탄을 받을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과 백화점식 운영은 이미 다른 대학들에도 일반화되어 있는 현상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4년제 대학들이 거의 모든 전공 분야의 학생들을 백화점식으로 모집, 교육하는 것은 전공 분야에 따른 대학의 차별성이나 특성을 희석시키고, 오직 아무개 대학이라는 간판과 명문서열만 부각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영문학과나 정치학과 없는 4년제 대학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전공분야에서의 이 같은 무차별성과 무특성은 도구주의나 학벌주의에 따른 대학 선택과 진학 행태를 그대로 용인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대학이 마치 잡화점처럼 모든 품목을 제공하는 것은 아무 가게나 가도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지만, 구색으로 갖추어 놓은 물건의 품질이나 가격은 전문점들이 제공할 수 있는 그것에 비해 뒤떨어지기 마련이다.

대학이 제공하는 전공 학과와 분야의 수가 잘게 나누어져 있으면 있을수록 해당 전공 교수들의 수도 잘게 나누어져 전공 학과 및 분야의 전문성도 약해지기 마련이다. 학과별, 전공 분야별로 적은 수로 단위를 이룬 교수들은 각자 교양과목, 개론, 기초적인 전공필수 과목 등을 나누어 맡고 나면, 정작 전문성이 있는 과목, 그리고 자신이 세부적으로 전공하는 과목을 강의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어진다. 이런 조건은 상당히 많은 교수들을 소위 '개론 선생'으로 전락하게 만들고, 강의와 연구 사이의 연계성 또한 약하게 만든다. 이런 사정을 한 학과 혹은 전공 분야의 교수가 20~30명 되는 일부 선진국의 대학들과 비교해 본다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그리고 왜 한국의 대학들은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지, 그리고 왜 한국의 명문대학들은 똑똑한 학생들을 뽑아 바보로 만들어 졸업시키는지 등이 어느 정도 자명해진다. 애초부터 우리나라 대학의 구조가 중소기업, 아니 잡화점식으로 되어 있다는 점, 바로 그것이 문제인 것이다.

한편, 교수들의 교육, 연구능력을 처지게 만드는 요인의 하나로 그 동안 많이 지적되어 온 것은 주먹구구식의 비합리적인 교수 충원 방식이었다. 학연 등 연고 중심의 비공개적인 담합과 힘겨루기식 채용관행, 똑

똑하고 혁신적인 후보보다는 현실적응력이 있고 순종적인 후보를 선호하는 안전제일주의 채용관행, 무조건 외국 박사(소위 선진국 대학의 학위소지자)를 선호하는 사대주의적 채용관행 같은 것들이 그것이다. 이런 관행들은 교육, 연구능력의 평균수준을 떨어뜨리고 소위 한국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의 하나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와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도 낳는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은 대학교수들 사이의 '칸막이 현상'이다. 어쩌다가 그런 칸막이 현상이 우리나라 대학에서 고착되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교수들 사이에, 학과 및 전공영역들 사이에, 그리고 대학들 사이에 가로 놓여 있는 견고한 칸막이들은 교수들의 교육능력과 연구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그리고 발휘하는 데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

강의는 담당한 교수 한 사람의 칸막이방속에서 이루어지며, 강의를 공동으로 하거나 관련된 자료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일은 흔하지 않다. 다른 학과나 전공 분야 '소속'의 교수에게 강의를 주는 일도 드물다. 이런 일은 강의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연구에서도 그러하다. 소위 공동연구라고 하는 것은 형식상으로만 공동인 경우가 태반이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공동연구는 오히려 드문 현상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런 칸막이 현상은 교수 개인 차원이나 전공 학과 및 영역 차원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차원에서, 즉 대학들 사이에도 있고, 이 경우는 학내에서보다 훨씬 더 심하다. 대학간의 교수 교류는 말할 것도 없고 강의 교류도 매우 소극적이다. "한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처럼, 한번

아무개 대학 소속이면, 소속 자체를 바꾸기 전에는 영원히 그 대학 울타리 안에 갇혀 사는 것이 대부분 대학교수의 운명처럼 되어 있다. 그러나 강의나 연구와 관련된 협력이나 정보 및 자료의 교환과 공동활용, 교수들과 대학들 사이에 서로 자극을 주고 받는 일 등은 소홀할 수밖에 없게 된다.

2. 정상화를 위한 대학의 과제

대학교육에서의 크나큰 소외와 국가적인 낭비를 극복하고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대학입시제도와 학벌주의를 타파하는 일을 비롯해서 사회 각계각층의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 대학이 할 수 있는 일로서 가장 긴급한 일은 크게 보아 두 가지 일 것으로 판단된다. 하나는 특성화이고 다른 하나는 유연화이다.

대학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특성화를 위한 노력을 해왔고 그 속에서 진통도 겪어왔지만, 앞으로도 특성화를 위한 노력은 한층 더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각 대학의 성격이나 설립취지에 잘 맞고, 또 현재 잘하고 있는 전공영역을 중심으로 특성화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큰 틀로 보면, 2가지 유형중 하나로, 즉 교육/학부 중심대학이나 연구/대학원 중심대학으로 분화해 나가야 한다. 물론, 이 두 가지 유형의 대학이라 하더라도 다시 몇몇 전공영역들을 중심으로 특성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언론정보학 중심의 교육/학부 중심대학, 경영행정학 중심의 교육/학부 중심대학이라든지, 기초자연과학 중심의 연구/대학원 중심대학, 인문계 중심의 연구/대학원 중심대학 등이 그것이다.

물론, 이러한 기본방향을 정립하는 일, 그리고 그러한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는 일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마찰이 적을 것이고, 강제적 수단이나 정리해고 방식이 아니라 잘되는 분야나 키워야 할 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른바 '포지티브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또 대학간의 협의와 협력, 대학과 정부 사이의 협의와 협력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날 재벌기업들 사이에서 추진되는 바와 같은 '빅딜'(사업교환)이 대학들 사이에도 이루어져야 하며, '단기수익' 효과가 뒤떨어지는 기초과학 분야나 연구중심 대학으로의 특성화는 정부 차원의 특별한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전환의 노력을 우리는 그 동안 '대학개혁'이라고 불러 왔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구조조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 대학들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뿐 아니라 대학교육의 소외와 비정상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그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다만 이것이 체계적, 합리적인 방식으로, 또 네가티브가 아닌 포지티브한 유인제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의 그러한 구조조정에서 당연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는 것은 교수채용 문제이다. 교수채용은 그 동안 많이 언급된 바와 같이 밀실행정, 낙하산, 학연/지연, 뇌물수수 등으로부터 벗어나 투명하게, 공개적인 기준과 경쟁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소위 '불량품'이 끼어들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대학당국과 교수들, 또 교수와 교수 사이의 갈등과 잡음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는 채용 방법 및 제도가 마련, 적용되

어야 한다. 특히 학과나 전공영역들 사이의 교수 정원 책정문제가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으며, 따라서 이 수준에서의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의 과정이 가장 공개적, 합리적이어야 하고 투명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과거 우리나라 정부가 해왔듯이 대학에서도 '수입대체공업화'의 전략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채용과정에서 국내대학 출신 박사에게 프리미엄을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수십년간 국내박사 학위자는 불이익을 받아 왔으며, 국내 대학의 교수들이 스스로 자신과 자신의 제자를 불신하는 풍조가 지속되어 왔다. 대학과 교수들 사이에 만연해 있는 학문적 사대주의와 '외제 선호' 사상은 엄청난 유학비용을 들이고 고급두뇌를 유출하는 손실뿐 아니라 국내 대학을 황폐화시키는 효과도 발휘했으며, 결국은 우리 학문의 자립성과 경쟁력을 일구어 나가는 노력을 소홀히 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무한경쟁이 아니라 무한추종의 시대를 살아온 것이다. 이제 우리의 대학들은 선진국의 이론과 학설을 계속 쫓아가고 복사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수입 제품들을 자양분으로 삼아 우리 토양에 맞는 새로운 것, 우리의 과학 같은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할 때이다. 정부가 지하철 홍보물을 통해 말한 바 있듯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 대학의 개혁과제 가운데 다른 하나는 칸막이를 허물어 유연성을 높이는 일이다. 유연성을 높인다는 것은 경쟁력을 높인다는 담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수와 학생, 대학교육에서의 소외와 비정상성을 극복하는 문제

와도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대학의 유연성은 주로 학생들에게 주어지기 시작했을 뿐이다. 복수전공제, 학점교류제, 최소학점졸업제 등의 도입, 적용, 확대가 그 예이다. 그러나 교수들은, 그리고 대학 자체는 아직도 칸막이방속에 갇혀 있다.

그러나 좀 급진적인 발상일지는 모르겠으나, 교수들 사이에 교류와 협력이 좀더 활발해져야 하고, 협동과 분업을 통한 공동의 강의도 자주 개설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학과나 전공 분야 소속 교수들과도 강의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하며, 심지어는 학과나 전공 분야를 넘어선 부서 이동 또 학교 이동도 가능하게 되어야 한다. 그 중간형태로 겸임교수제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칸막이'에 익숙하고 또 그러한 대학구조를 운명처럼 받아들여 온 교수들에게는 이 같은 발상이 생소하거나 황당무계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칸막이가 대학교수들의 강의와 연구에 과연 얼마만큼 전문성을 발휘하고 진작시켜 주었는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런 구조가 대학을 얼마나 교양교육 센터로, 또 교수들을 얼마나 교양교육 교수로 만들어 왔는지도 되물어 보아야 하고, 전공교육과 관련해서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지루한 강의, 또 취직과 관련해서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강의라 생각하고 하품을 했을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대학교육에서의 소외와 비정상성이 주로 대학이나 대학교수들 탓인 것은 결코 아니다. 요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대학이나 대학교수들이 할 수 있는 일, 또 해 나가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따져 보

면, 칸막이를 허물고 유연성을 제고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고 급선무라는 이야기다.

3.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과제

고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인력수급 정책을 확립하고 인력시장에 개입하여 자유경쟁적 시장기능에 따른 실패를 보완하고 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력수급 정책과 시장개입 정책은 대학을 비정상화하는데 원천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중등교육 자체에 대해서도 필요하고, 고등교육을 받은 고급인력의 수급과 관련해서도 필요하다.

우선 중등교육을 대학입시 위주 교육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정상화하여야 한다. 대다수의 대학 신입생들이 목말라 하는 교양교육과 인격함양, 폭 넓은 인간관계와 취미활동 등에 관한 욕구가 중등교육 과정에서 해소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대학이 출세와 취직의 도구로 인식되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후 곧바로 취직하는 것이 정상적인 일로 인식되도록 하여, 웬만하면 대학에 진학하는 풍조를 없애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입시 준비를 위한 중등교육의 낭비를 줄이고 그 대신 교양과 실기가 균형 있게 교육되도록 교육과정을 획기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이 교육과정은 그 수준에서 완결성을 갖도록 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효과를 지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정부는 각종 취업기관에 압력을 행사하고 권고하여 학력에 따른 차별 고용이나 임금체제 등을 불식시켜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등교육에 대한 인식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대학은 교양인이나 일반 직장인을 양성하는 기관이 아니라 전문가를 양성하는 곳으로 인식되어야 하고,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학생들은 입학하지 않게 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도 여기에 맞추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의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그러한 정책에서 핵심을 이루는 것이 바로 특성화와 유연화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해야 할 일은 대학보다는 정부가 더 많다.

정부는 우선 대학의 특성화와 유연화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이미 정부의 대학정책 기본방향으로도 자리잡고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개혁 평가와 학부제 도입을 통한 특성화 유도라든지, 소수의 대학원 중심대학을 지정, 집중 지원할 계획을 수립·추진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러한 정책의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이러한 정책을 '대학의 경쟁력 제고'라는 담론 속에서, 그리고 대학개혁평가 우수대학에 대한 특별지원금 포상제도와 같은 '당근' 정책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큰 그림' 속에서, 고급인력에 대한 수급문제와 대학의 운영 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려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의문스러운 점이 많다.

가장 대표적인 사항은 인문·사회과학과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투자, 그리고 계획이 대단히 미흡하다는 점이다. 정부가 시장경제 질서에 대해 개입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분야는 도로, 항만, 전기,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분야이다. 이는 고등교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되어야 할 것이며, 인문·사회과학과 기초과학 분야는 바로 사회간접자본의 구실을 하는 분야이다. 이 분야는 고등교육 자체에 대해서뿐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축적, 개발, 그리고 적용을 통해 실 사회에 대해서도 사회간접자본의 구실을 한다. 이런 분야를 소홀히 하면서 가시적인 성과와 경쟁력이 쉽게 나타나는 응용분야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은 우리나라 전반이 그래왔듯이 '근시안적'인 정책이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소위 국가경쟁력을 원천적으로 향상시키는 데에는 기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는 정책이다.

대학개혁에서의 유인시스템도 이런 맥락에서 적용되는 경우, 그 결과는 마찬가지다. 과연 어느 대학이, 재정 형편도 여의치 않은 어느 대학이, 소위 '장사 안 되는' 그런 분야를 특성화하고 지원하고자 하겠는가. 대학이 안 하고 또 못하면 누가 그런 일을 해야 하겠는가. 독지가 아니면 정부밖에 없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만들어진 고급인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수급정책이 있는지, 또 그러한 큰 그림에 입각한 개입, 조절 정책은 있는지 의심스럽다. 대학을 진학하고 졸업한 고급인력의 수요-공급 문제는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그대로 내맡겨져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해마다 심각성을 더해가는 고학력실업자 문제는 속수무책이고 정부의 소관사항이 아닌가. 그 문제는 본인의 능력 여하에 달렸거나, 기업과 대학이 알아서 할 일에 속하는 문제인가.

이 점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문제는 역시 정부가 고급인력의 수급문제에 대해 관심이 적다는 것, 그래서 큰 그림이 없다는 것, 그리고 결국은 대학의 고등교육에 대해서도 책임감이 적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런 기초 위에서 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개혁을 유도하는 정책은 고급인력의 수요-공급을 시장 자율에 방치하는 정책과 맞물려 결국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정부적인 시장만능과 시장실패를 가속화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망할 대학은 망하고, 경쟁력 없는 대학과 전공 분야 역시 망할 수밖에 없고 망하게 해야 한다?

대학의 개혁과 특성화를 위해 정부가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분야는 기초과학 분야이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 이 분야는 채산성도 떨어지고 가시적인 성과가 단기간에 나오지도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대학도 사학재단도, 그리고 학생이나 학부모들도 별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 정부마저 이를 외면한다면 우리나라 장래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대학교육의 소외와 비정상성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대학특성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하지만, 기초과학 분야에 대해서만은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컨대 대학을 크게 교육중심대학과 연구중심대학으로 나누어 연구중심대학을 집중 지원하고자 한다면, 기초과학 분야는 연구중심대학에 배치하여 육성,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정부의 재정 지원이 국립대학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국립대학들을 우선적으로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전환해 가는 것이 용이하고 현실 적합성도 클 것이다. 더욱이 국립대학들은 각 지방에 하나씩 골고루 편재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중심대학이 권역별로 골고루 분포되는 장점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사립대학들 중에서도 권역별로 연구중심대학으로 선정하여 국립대학 수준의

재정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이며, 국립대학들 중에서도 기초과학 혹은 연구중심대학으로 특성화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중심대학으로 선정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그림은 물론 큰 그림에 속하는 것이며, 각 대학들이 일부의 전공 분야들을 중심으로 교육 혹은 연구 중심으로 특성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방향타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당면한 과제는 백화점식 대학을 없애고 대학별, 권역별 특성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특히 서울대학과 같은 백화점식 명문대학은 해체하거나 특성화를 많이 해야 한다.

그래서 국문학과를 가려면, 우리 지역에서는 오직 아무개 아무개 대학 중에서 골라야만 하고, 정보통신학부를 가려면 오직 아무개 아무개 대학 중에서만 골라 진학해야 하는 상황이 되도록 바뀌어야 한다. 이런 상황은 학생들이 학교 간판보다는 전공 분야를 보고 그 대학에 진학하는 풍조를 확대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며, 강의를 제공하는 대학의 입장에서 그 분야에 관한 한 전문성이—적어도 그 권역 내에서는

—최고수준이 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될 것이다. 대학의 특성화, 유연화가 많이 이루어지면, 그만큼 전공 분야당 교수 수도 많아지고 전공 분야 내의 학술적 교류와 협력, 그리고 경쟁도 더 많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큰 그림 속에는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급인력의 수급에 대한 조사, 예측,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거기에 입각하여 고등교육 정책 및 대학개혁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중등 교육과정에 대한 개편, 대학진학 희망 인구에 대한 조절, 국·사립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방안, 대학졸업 고급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 알선 등의 정책이 입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유팔무/서울대 사회학과와 대학원을 마치고 독일 자유베를린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계간 학술지 『경제와 사회』 편집주간, 본지 편집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산업사회학회 회장, 사회과학 포럼 대표, 『동향과 전망』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공저로 『춘천리포트』,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사회학』 등이 있다.